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정책동향

VOL.06
2013. 07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6.1 ~ 6.30)

건축문화 부문

-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실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대책 마련8
- 젊고 유능한 신인건축사 등용문 넓어져!
- 올해 한옥건축 전문인력 200명 키운다!
- 부산시, 2013년 제1회 산복도로 포럼 개최
- 한국 건축문화 인재 등용문, '2013 젊은 건축가 상' 선정
- 광주시, 2013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서울시 건축상에 도전하세요

녹색 건축·도시 부문

- 부산 도심에 '푸르게 푸르게'
- 그린부산 사업추진으로 도심 가로환경 눈에 띄게 변해
- '14년 평화생태마을 국비 전국 최다확보
-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된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도시내 빗물을 관리한다!
- 면적요건 대폭 완화로 해안·내륙권 개발사업 활성화 전망
-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 건축행정정보 빅데이터<세움터> 가공·분석, 민간 공급 시작
- 건축법에 "실내건축제도" 도입, 시설기준 마련된다.
- 미안마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 국토부, 민간활용도 높은 국가공간정보 본격개방 시작했다

이슈와 연구동향 |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브랜드화(2008~2013)

Contents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이달의 정책 Highlights	2
	정책유형별 동향분석	3
	건축문화 부문	5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실시	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대책 마련	5
	젊고 유능한 신인건축사 등용문 넓어져!	6
	올해 한옥건축 전문인력 200명 키운다!	6
	부산시, 2013년 제1회 산복도로 포럼 개최	7
	한국 건축문화 인재 등용문, '2013 젊은 건축가 상' 선정	7
	광주시, 2013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8
	서울시 건축상에 도전하세요	9
	녹색건축·도시 부문	10
	부산 도심을 '푸르게 푸르게' - 그린부산 사업추진으로 도심 가로환경 눈에 띄게 변해	10
	'14년 평화생태마을 국비 전국 최다확보	11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11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된다	12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13
	마을주민과 지역기업이 함께하는 팽이부리마을 방음벽개선사업 완료	13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도시 내 빗물을 관리한다!	13
	면적요건 대폭 완화로 해안·내륙권 개발사업 활성화 전망	14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4
	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15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조치	16
'2014 원도심 행복 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제안 추진	16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44점 인증	17
다함께 행복하고 희망을 나누는 마을만들기	17
건축행정정보 빅데이터<세움터> 가공·분석, 민간 공급 시작	18
광주시,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 비전'전문가 워크숍 개최	19
행복청, 공동주택 특화방안 추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가로 친화형 주거단지로 조성	19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올해 순풍에 돛을 올린다!	20
대구시, 단독주택 밀집지역 폐·공가 공공용지로 활용	20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본격추진	21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달빛 재생 투어' 실시	21
지도위에 펼쳐지는 실감 나는 부동산정보 융합행정!	22
건축법에 '실내건축제도' 도입, 시설기준 마련된다.	23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사장을 디자인한다!	23
민·관·산·학 공동으로 신개념 도시재생형 쌈지공원 조성	24
미얀마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25
국토부, 민간 활용도 높은 국가공간정보 본격개방 시작했다	26

이슈와 연구동향 #2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브랜드화 (2008~2013)	27
-------------	-----------------------------	----

이 달의 정책 *Highlights*

건축문화 부문

이번 달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한옥 건축산업 육성 사업의 하나로 한옥전문인력 200명을 양성하기 위해 6개 교육 기관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생활에 맞는 수준 높은 한옥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잠재력 있는 신인건축사 발굴을 위한 '대한민국 신인 건축상 대상' 작품공모를 시행한다. 문화관광부에서도 '2013년도 젊은 건축가 상'으로 올해 6명(3팀)을 선정하여, 우수한 신진건축가를 발굴하였으며, 선정된 신진 건축가들에게는 작품전시회, 작품집 발간, 국내외 건축 행사 참여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녹색건축·도시 부문

녹색 건축·도시 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LED 제품 교체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주택관련 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생활권 내 도시녹화사업, 자투리땅 녹화 등 시민 체감형 녹화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발표하였다. 강원도는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화천, 양구, 고성군 등 3개 군을 선정하고, 매년 국비를 5억 원씩 4년간 총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3년에는 '화천 DMZ 사방거리마을', '고성 송정마을' 두 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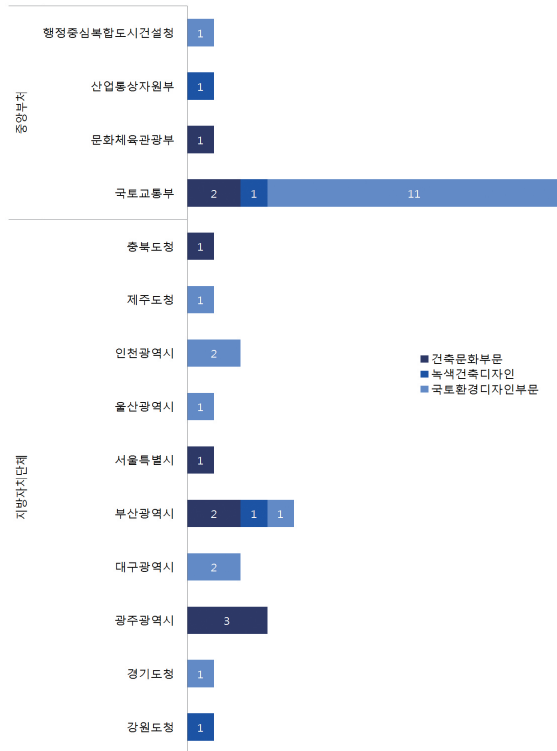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에서는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와 범죄예방설계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6월 4일자로 제정·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는 정부 3.0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행정정보 빅 데이터<세움터> 가공·분석 및 민간 공급시작'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만 동 건물의 DB구축 및 등록·갱신 기능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하고, '14년부터는 부동산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2013년 6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건축·도시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17건(50%)씩 총 34건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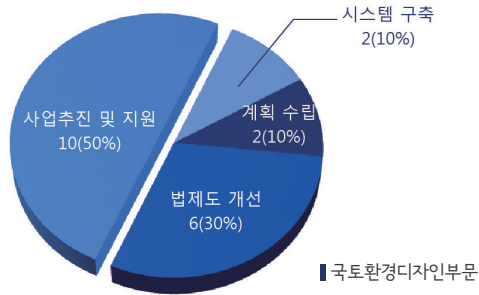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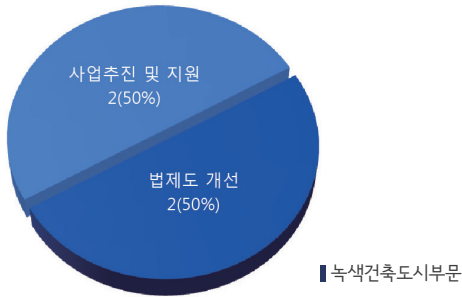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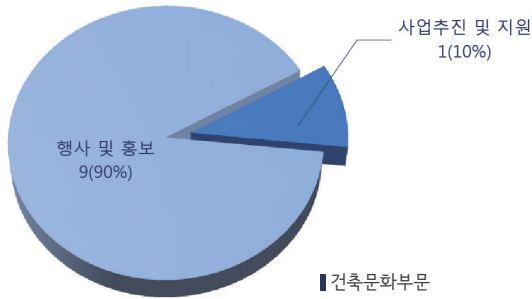


중앙부처에서는 총 17건 중에서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에 관련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이 12건(70.6%)으로 중점 발표되었다. 가장 많은 시책 및 사업을 발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가공·분석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공포' 등 법·제도 개선안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제3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 '부산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대책 마련', '제주도청, 지적재조사(바른 땅)사업 본격추진' 등 지자체별 진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 및 사업 17건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정책사업을 발표한 부문은 「국토환경디자인부문」으로 총 8건(47.1%)이 발표되었다.

주관부처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부문별 합계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2(5.9%)	1(2.9%)	11(32.4%)	14(41%)
	문화체육관광부	1(2.9%)	-	-	1(2.9%)
	산업통상자원부	-	1(2.9%)	-	1(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1(2.9%)	1(2.9%)
합계 (중앙부처)		3(8.8%)	2(5.9%)	12(35.3%)	17(50%)
지방자치단체	강원도청	-	1(2.9%)	-	1(2.9%)
	경기도청	-	-	1(2.9%)	1(2.9%)
	광주광역시	3(8.8%)	-	-	3(8.8%)
	대구광역시	-	-	2(5.9%)	2(5.9%)
	부산광역시	2(5.9%)	1(2.9%)	1(2.9%)	4(11.8%)
	서울특별시	1(2.9%)	-	-	1(2.9%)
	울산광역시	-	-	1(2.9%)	1(2.9%)
	인천광역시	-	-	2(5.9%)	2(5.9%)
	제주도청	-	-	1(2.9%)	1(2.9%)
	충북도청	1(2.9%)	-	-	1(2.9%)
	합계 (지방자치단체)	7(20.6%)	2(5.9%)	8(23.5%)	17(50%)
총 계		10(29.4%)	4(11.8%)	20(58.8%)	34(100%)

■ 주관부처별 정책동향



각 부문에 대해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문화 부문」은 전체 34건(100%) 중 10건(29.4%)으로 이중 ‘행사 및 홍보’분야 9건(26.5%)의 정책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34건 중 4건(11.8%)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녹색건축도시 부문」은 ‘법·제도 개선’분야와 ‘사업추진 및 지원’분야의 정책사업이 각각 2건씩 발표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부문」에 관련한 발표는 총 20건(58.8%)으로 ‘시스템 구축’분야 2건(5.9%), ‘계획 수립’분야 2건(5.9%), ‘법제도 개선’분야 6건(17.6%),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정책사업 10건(29.4%)이 발표되었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2(5.9%)	2(5.9%)
법·제도 개선	-	2(5.9%)	6(17.6%)	8(23.5)
사업추진 및 지원	1(2.9%)	2(5.9%)	10(29.4%)	13(38.2%)
시스템 구축	-	-	2(5.9%)	2(5.9%)
연구 및 교육	-	-	-	-
행사 및 홍보	9(26.5%)	-	-	9(26.5%)
총 합계	10(29.4%)	4(11.8%)	20(58.8%)	34(100%)

■ 부문별 세부분야

전반적으로 6월 보도된 정책과제들은, 총 34건 중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의 정책과제가 13건(38.2%)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다음으로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정책 사업이 9건(26.5%), ‘법·제도 개선’ 분야 8건(23.5%),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는 3건(4.9%)의 정책 사업이 발표된 것으로 정리된다.

건축문화 부문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실시

충청북도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모든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공디자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발굴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의 도시 충북'을 주제로 '제2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일정은 6월 5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작품접수 및 심사를 거쳐 총 30점(총 상금 2,500만 원)을 선정할 예정으로, 참가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벤치, 가로등, 펜스, 휴지통, 음수대, 파고라, 플랜터, 상징조형물 등)로 우수작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표준시설물로 인증하는 등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번 공모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충북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가미된 특색 있는 공공시설물 발굴을 통해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06.11

충청북도 공보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대책 마련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공간포럼' 개최

부산시는 건강한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6월 1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

제회의장에서 '제15차 부산공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주최하고 (사)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포럼의 연중 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공간포럼'이며 부산의 지역 공간자원 발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층간소음 발생 메카니즘 및 국내아파트 바닥구조 변천(양관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바닥충격음 측정기준 및 측정방법', '측정사례(김항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를 통해 층간소음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설계 및 시공품질관리 방안(염성곤 삼성건설 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존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방안 및 개선사례(이병권 대림산업 기술연구소 과장)' 발표로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어 참석 패널 및 시민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대책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일차원적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요즘 각 계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이번 포럼을 통해 훼손되고 있는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한다."라면서, "향후 진행되는 포럼에서도 부산시민의 필요와 관심에 부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3.06.11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실

젊고 유능한 신인건축사 등용문 넓어져!

2013년 신인건축사 대상 작품 공모... 7월 12일까지 신청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공모가 6월 17일부터 실시된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은 역량은 있으나 경력이 부족하여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신인건축사에게 설계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공모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만 10년 이내)하고 공고일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신인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모 참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완공된 작품 1개 이상 포함) 및 건축물대장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시행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현장실사 포함)를 거쳐 8월말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이 지급되고, 수상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책자 발간 및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가 잠재력 있는 신인건축사들이 시장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향후에도 신인건축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6.14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올해 한옥건축 전문인력 200명 키운다!

국토교통부, 2013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국토교통부는 한옥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6개 교육기관(3개 과정)과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13.6.11)하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위탁교육 기관에는 총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기관별로 6월 중 교육생을 모집하여 7월부터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한옥설계과정은 경상대·대한건축사협회·명지대·전북대 등 총 4개 기관이 주관하고, 한옥시공관리자과정과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는 각각 건설기술교육원과 (주)한옥과문화가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구분	한옥설계 전문인력	한옥시공 중간관리자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
지원금액	· 5억2천만 원 (각 1억3천만 원)	· 5천만 원	· 3천만 원
교육기관	· 4개소	· 1개소	· 1개소
교육인원	· 교육기관별 45명 내외	· 25명 내외	· 25명내외
교육대상	· 건축사, 예비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등	· 한옥교육(3개월 이상) 이수자, 건축분야(산업) 기사, 기능사	· 건축관련 학부생(3,4학년), 대학원생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160시간 이상	· 3개월 과정 * 114시간 이상	· 2주 과정 * 80시간

동 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 설계와 시공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생활에 맞는 수준 높은 한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06.17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부산시, 2013년 제1회 산복도로 포럼 개최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성과 및 관련정보 공유를 위한
‘제1회 산복도로 포럼’개최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3차년도를 맞이하여 그간의 마을만들기 성과와 관련정보를 공유하고자 6월 25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마을계획가, 마을활동가,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산복도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홍재봉 우리마을네트워크 사무국장(3차년도 마을활동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4인의 발표 및 질의·응답의 시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발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능과 역할(김동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장)’, ‘초량10지구 마을만들기 사례(안효득 인사이트영 운영위원장, 1차년도 마을계획가)’, ‘서대신1동 마을만들기 사례(최강림 경성대 교수, 2차년도 마을계획가)’, ‘범천구역 마을만들기 추진방향(강동진 경성대 교수, 3차년도 마을계획가)’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부산시는 2011년 영주·초량, 2012년 아미·감천, 2013년 범일·범천구역을 대상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좌천·수정·주례구역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013.06.24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한국 건축문화 인재 등용문, ‘2013젊은 건축가 상’ 선정

201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10.25~10.31, 서울) 기간 중 시상·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

하는 2013년도 ‘젊은 건축가 상’에 신혜원(lokaldesign), 김주경, 최교식((주)오우재 건축사사무소), 조장희, 원유민, 안현희(제이와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3개 팀, 6명이 선정되었다.

올해 ‘젊은 건축가상’으로 선정된 건축가들의 작품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 시민의 일상 생활공간의 개선 그리고 서민복지와 기본적인 거주권리와 관련된 공공 프로젝트 사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젊은 건축가 상’은 2008년부터 문체부가 우수한 신진 건축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젊은 건축가’로 선정된 건축가에게는 작품 전시회, 작품집 발간, 국내외의 건축 행사 참여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2013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 초대되어 작품 전시회를 갖고, 그 기간 동안 ‘작가와 대화’시간을 통해 건축 관계자 및 시민,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작업 내용 및 과정,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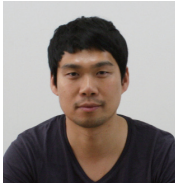


- 신혜원
- lokaldesign 대표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
- 제 10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작가
- 2010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열린도시/변화를 위해 작가

작가이력



[(좌)사직공공프로젝트/호르는풍경, (우)2012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조장희
- 제이와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주)포스코A&C건축사사무소 재직
- 한양대 건축학부 졸업



- 원유민
- 제이와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VMX Architects in Amsterdam 재직
- Technology University of Delft(MSc) 졸업
- 한양대 건축학부 / TU Delft(MSc) 졸업



- 안현희
- 제이와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재직
- 한양대 건축공학부 졸업

■ 작가이력



■ (좌)별교주택 : Low Cost House Series 1, (우)강진 산내들지역아동센터



- 김주경
-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소장
- (주)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근무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최교식
-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소장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근무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대학원 졸업

■ 작가이력



■ (좌)청산도 향토 역사문화전시관, (우)청산도 느린섬 여행학교

2013.06.24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

광주시, 2013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아이디어 도출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도출된 도시재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해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키고자 ‘2013년도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낙후된 구도심 및 주거·상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일반시민,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7까지이며,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서 공모전 상세요강 및 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희망마을 만들기,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내년도 사업과 접목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3.06.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서울시, '제3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 공모(6.28~7.26)

주거·비주거·건축전문·건축명장·대학생 공모 등 5개 부문 대상

서울시는 6.28(금)부터 제31회 서울시 건축상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올해 31회째를 맞는 서울시 건축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서, 건축의 공공 기여도가 탁월하고 예술적 가치와 기술적 수준이 뛰어나 서울의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작품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상은 주거(중저층, 중고층), 비주거(공공, 민간), 건축전문(한옥, 친환경, 공간환경), 건축명장, 대학생부문 등 5개 부문에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5명 등 총 31명을 선발한다. 올해는 건축상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현장대리인 및 시공업체에게 '건축명장' 상을 시상함으로써 좋은 건축을 만들어 가는 건축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작품공모는 6.28(금)부터 7.26(금)까지로 1차 서류심사, 2차 공개PT, 3차 현장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시상은 10월 21일 『2013 서울건축문화제』 개막행사와 더불어 진행하며 서울건축문화제 기간동안 작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기념동판을 시상하며, 주택 관련 분야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대학생부문은 다른 부문과 달리 6.28(금)부터 7.19(금)까지 에세이와 스케치를 공모해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예비수상자들과 1박 2일의 건축워크숍을 통해 시 건축정책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결과물을 제출·평가하여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을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응모자격을 국내외 대학생으로 확대해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개최국으로서 위상 제고 및 서울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13.06.27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녹색건축·도시 부문

부산 도심을 '푸르게 푸르게'- 그린부산 사업추진으로 도심 가로환경 눈에 띄게 변해..

생활권 내 도시녹화사업과 자투리땅 녹화 등의 시민체감형
녹화사업 추진으로 도심 내 328천여 그루의 수목심기 성과 거둠

'저탄소 명품 그린부산'을 목표로 도시녹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부산시가 봄철 나무심기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 그린부산을 선포하고 제1기 도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산시는 제2기 성장기를 맞이하여 올 봄에도 대대적
인 녹화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도심 구석구석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을 펼쳤다. 가로수식재 등 10개 유형 사업에 1월부터
4월까지 328천여 그루의 수목을 심어 회색도시를 한층 더 푸
름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특히 방치된 도심 내 자투리
땅에 녹화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정책을 펼쳐 나무
심기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인 결과 지난 시민나무심기 행사에
는 무려 4천여 명이 스스로 행사에 참여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생활권 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녹지정책을 지속적으
로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의욕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그린부산 추진 사업은 제1기 도약기와 제2기 성장기, 제3
기 안정기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며 7년간
2,100억 원의 사업비기 투입될 계획이다. 도시녹화사업, 도시숲
조성, 부산시민공원조성 등 현재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어 이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부산시의 생활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나무심기 행사 현장사진



■가로화단 조성현황 사진

2013.06.04

부산광역시 녹지정책과

'14년 평화생태마을 국비 전국 최다확보

3개소, 75억원(국비60, 지방비15) 확보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화천, 양구, 고성군 등 3개 군이 선정되어 매년 국비 5억 원씩 4년간 총 60억 원을 확보하였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접경지역의 잘 보전된 자연·생태공간 전통문화 등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생산 및 생태·녹색관광 등을 통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강원도 사업대상지는 화천 간동면 방천리의 수달마을, 양구 양구읍 정립리의 예풍경마을, 고성 거진읍 송포리의 웰빙 명태마을이며 각각 4년간 국비 20억원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

한편, 강원도는 '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개 마을이 선정되어 275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접경지역 낙후마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지구상에 단 하나 남은 전쟁의 상흔이 산재하고, 민족의 고통과 강원도민의 고단한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인 접경지역 일원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 평화생태마을 선정 추진현황]

선정연도	사업명
2011년(4개)	춘천 김유정 문학마을, 화천 산천어 생태마을, 양구 자연생태 치유마을, 고성 진등마을
2012년(5개)	철원 두루미 마을, 화천 동지생태마을, 양구 백토마을, 인제 용늪마을, 고성 향도원 치유숲마을
2013년(2개)	화천 DMZ 사방거리마을, 고성 송정마을

2013.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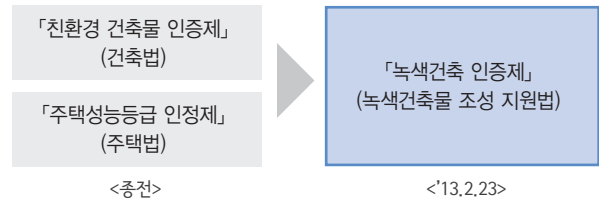
강원도청 DMZ정책담당관실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출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그동안 건축법(친환경건축물 인증제)과 주택법(주택성능등급 인정제)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되었던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여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한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 및 고시의 제명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에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으로 변경하였다.
- 녹색 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도중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연면적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하였다. (9.1 시행)
-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하였다.
-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5년마다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 명칭인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를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하였고,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13.06.27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된다

LED 제품 교체 비율 '13년까지 40% 이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소비 형태를 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①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 대상 확대, ② LED 제품 교체 및 설치 비율 강화, ③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의무화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하였다.

하절기 최대 전력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연면적1,000㎡(기존: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신축·증축시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 전력,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는 냉방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또 조명부문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기존 건축물 경우 LED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신축 건축물 경우 30%를 LED로 설치하되 설계 단계부터 LED 조명 설치비율이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14년 이후 설치 비율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12시간 이상) 사용되는 조명에 대해서는 연도별 교체비율 내에서 우선적으로 LED 제품으로 교체하

도록 하는 한편 신축 건축물은 '14년부터 LED 제품을 100% 설치하도록 했다.

구분	'13	'14	'15	'17	'20
기존 건축물 (교체비율)	40%	50%	60%	80%	100%
신축 건축물 (설치비율)	30%	45%	60%	100%	-

* '12년 말 공공기관 LED 제품 보급 비율 : 15.5% (교육기관 제외시 26.2%)

■ 연도별 LED보급 목표

아울러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연면적 10,000㎡) 이상의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 결과, 에너지절감 효과가 5%이상 발생하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진단종료 후 2년 이내 에너지절약기업(ESCO) 투자 사업과 연계한다.

이밖에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감과 전력피크 관리에 효과가 있는 BEMS, ESS를 공공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IT기술과 에너지절약기술 결합)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100kW 이상의 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3.06.2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마을주민과 지역기업이 함께하는 팽이부리마을 방음벽개선사업 완료

마을주민과 지역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팽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

인천시는 팽이부리마을 지역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주)와 함께 팽이부리마을 주민의 소득원개발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립 및 방음벽개선사업 추진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2년 12월 20일(목) 12:00에 시장 접견실에서 송영길 인천시장, 동구청장,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 대표, 조건호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팽이부리마을과 두산인프라코어의 경계를 이루는 방음벽은 총 길이 180m, 높이 6m의 거대·노후시설로 그 동안 지역주민에게 위압적이고 단절된 공간이었으나, 인천시와 동구청은 방음벽의 소유자인 두산인프라코어와 도시환경디자인 전문업체인 UDI 도시디자인그룹이 참여하여 팽이부리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다용도 프레임, 평상, 미니 텃밭 등을 제공하여 마을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로상의 굴까기작업장, 어구 등 마을 주민들의 개인시설물 철거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과 화합을 이뤄 정상적 진행이 가능하였으며, 주민, 전문가, 지역활동가 및 공무원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주민들이 설계 등 사업에 직접 동참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도시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하여 방음벽하단에 도시 텃밭 조성 등 주민참여 공간을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음벽개선과 함께 팽이부리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설립하여 팽이부리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을

개발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건설 중인 임대주택을 올해 11월에 준공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팽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조감도



■ 방음벽 개선 후(도색작업, 다용도 프레임 등 설치)

2013.06.03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도시내 빗물을 관리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6.4~7.14)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하여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내 유휴부지인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평생학습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4일부터 입법예고(기간 6.4~7.14)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내 자연 물순환 회복 및 수해방지를 위하여 도로, 보도, 주차장, 학교,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투수성 포장 등)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있는 우수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빗물을 저장하여 수해에 대응하는 우수지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복개 이전의 빗물 저장 용량이나 처리 능력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였다.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등)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물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06.03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면적요건 대폭 완화로 해안·내륙권 개발사업 활성화 전망

국토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따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해안관광지 등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의 지정범위가 30만㎡이상으로 과다하여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이는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각종 개발 사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06.04

국토교통부 동서남기획단 기획총괄과

도시개발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 및 범죄예방 설계 강화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5일부터 40일간(기간 6.5~7.1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활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1.6조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었으나,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3.22) 내용을 구체화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이 활성화되어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예방의 새로운 기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3.06.0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건축설계,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공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6월4일자로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

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9월 13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약1.4배)	1,705명/920명(약1.9배)

설계 등 건축서비스 분야는 제조업 대비 일자리 창출(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큰 것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지식산업이나, 우리 건축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그치며, 건축설계는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영역으로 인식하여 왔다.

공공부문의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설계자의 디자인·기술력을 평가하기보다 설계 가격을 중심으로 발주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 있는 설계자들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내 건축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해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건축물 창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설계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품격 높은 건축물을 우수 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수하거나 리모델링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규모와 내용,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및 공공적 가치와 품격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축진흥원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건축분야의 정책연구·개발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으로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

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우리 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고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창의력 있는 건축물들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13.06.04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울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조치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도모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등 면적 4만 5,092㎡ 해당)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며, 해당면적은 4만 5,092㎡으로 파악됐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15m 이상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섬 형태의 1만㎡미만의 면적을 말하며, ‘경계선 관통대지’는 필지의 면적이 1,000㎡이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지역으로 해당 필지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절반 이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제 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4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8월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가 지적경계선과 일치하

게 되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3.06.10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2014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제안 추진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능한 주거지역 대상으로
인천시 거주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신청

인천시는 올해 8개 선도사업 이후, 내년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주민제안으로 신청 받는다. 재건축·재개발 중심으로 추진해오던 구도심 재생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제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 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취지의 주민 제안 사업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공부방, 놀이방 등 공동이용시설, 마을벽화그리기, 안전시설, 담장허물기, 생활폐기물분리배출시설 등 그동안 주민이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내용을 군, 구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제안은 인천시 거주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사업제안서와 사업제안자 소개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 구에 6월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접수하면, 관할 군, 구에서 법적 사항 등 1차 검토한 후,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통해 2차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4년 예산에 반영되면 최종 사업이 확정된다.

이번에 신청 받는 ‘2014 원도심 행복찾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아파트 이외의 지역으로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가능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된다.

인천시 담당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민제안으로 시행하면 생활에 실질적이고 다양한 사업내용들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제안 과정에서 주민 간에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2013.06.11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44점 인증

인증마크 사용권한 3년간 부여, 우선사용 권장 등 인센티브 부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12일 제5회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 3월 인증제 선정계획을 공고한 이후 총 207점의 시설물에 대한 서류 및 현물심사를 거쳐 펜스, 벤치, 가로등, 파고라 등 총44점의 제품을 최종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된 공공시설물에는 인증서가 수여되며,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GGGD, Gyeonggi Good Design) 사용 권한 부여, 전국 공공기관에 인증작품 수록 작품집 배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게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인증제심사에서 탈락한 제품을 대상으로 '디자인 클리닉제'를 실시,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라움하우스의 플랜터

■ 디자인팩토리의 음수대

■ ㈜예건의 벤치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은 “인증제품 우선 사용권장,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 시 인증제품 활용 등을 추진해 인증제품의 사용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6.12

경기도 디자인담당관 디자인산업팀

다함께 행복하고 희망을 나누는 마을만들기

상향식 마을만들기 및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6대 전략 14개 과제 추진

부산시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의 마을공동체 회복에 주력하고자 2017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마을활동가 1,004명을 발굴·육성하는 '마을활동가 1,004명(천사)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13년 제2기 도시재생 원년을 맞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등으로 대두된 마을공동체 기반의 자력 수복형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를 위한 촉매로서의 마을활동가 등 인적자원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마을만들기를 스스로 실천하고 다함께 행복하고 희망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6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할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 및 지속가능한 상생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6대 전략은 '마을활동가 육성 기반체제 확립', '다양한 마을활동가 창조인력 발굴',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활동가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육성', '마을활동가양성프로젝트를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 본격화', '마을만들기 정보자원 확충과 시민 공감 확산' 등이다.

세부 실행과제로 먼저 마을활동가 육성 기반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마을활동가 육성·운영(마을리더, 주민활동가, 마을코디네이터 3단계 분류)', '역동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시,

지원센터, 자치구·군 협력), '마을활동가양성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체 기초조사·역량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다양한 마을활동가 창조인력 발굴을 위해서는 '마을활동가 등급별(마을리더, 활동가, 코디네이터) 체계적인 모집·양성', '다양한 계층별 창조인력(여성, 청년, 학생, 주민, 시장상인 등) 활용 체계 구축' 과제를 시행한다.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활동가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마을활동가 양성 인증 시스템(인증서 교부) 구축', '마을활동가 현장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과제를 진행한다.

마을활동가양성프로젝트를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는 '마을네트워크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기반강화(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활동가 양성프로젝트와 연계한 마을공동체 사업 본격화(공모+주민제안)', '마을공동체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정보자원 확충과 시민공감 확산을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정보시설 구축', '시민과 함께 마을만들기 추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5월 22일 개소한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원센터는 오는 7~8월 집중홍보를 실시한 후 9~10월 시·구·군,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활동가를 모집하여 마을활동가 육성 및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6월 중 마을활동가 프로젝트 주요정책 자문을 위한 마을활동가 육성 실무 워킹그룹(민·관·전문가 10명 정도)을 구성·운영하고, 다양한 계층별 창조인력활용 체계구축을 위해 계층별 창조인력 전수조사를 6~7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마을활동가 붐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식지 제작, 커뮤니티 맵핑 구축', '설명회, 워크숍 주기적 개최', '축제지원팀 운영, 전국 박람회 등 개최', '매년 10월 4일

을 '마을활동가의 날'로 운영하여 '마을활동가 참여 제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3.06.12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건축행정정보 빅데이터<세움터> 가공·분석, 민간 공급 시작

건축행정 정부3.0시동, 국토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간 MOU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 3.0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가공·분석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13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와 체결했다.

현재 약 680만동의 건축물 현황과 연간 인·허가 97만 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고 있으나, 그간 건축통계는 월·분기별 인허가 및 준공현황 등 일부내용만 작성 제공되고 있어, 정책개발 및 민간분야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현황 통계 뿐 아니라 통계 예측·분석, 지도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건축통계가 개발·제공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정보의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축통계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본 협약 체결은 다양한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건축통계를 타분야 정보와 융·복합을 통해 정부 3.0시대를 선도하는 핵심통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이 적극 협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013.06.1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광주시,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 비전' 전문가 워크숍 개최

14일 광주디자인센터, 광주 디자인 발전방안 모색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4일 오후 2시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1일 발표한 2015년 IDA(국제디자인연맹)광주총회 유치에 계기로, 광주가 국제적 디자인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 비전추진위원회, 광주디자인센터와 공동으로 새로운 비전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천 과제를 연구하는 자리다.

전문가 워크숍에는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 비전 추진위원을 비롯해 학계, 디자인계, 언론계, 광주시, 시의회 등 각계 전문가 그룹 40여명이 참여하며 이순인 홍익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4개 분과별 전문가 그룹이 모여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 네트워크 구축, IDA와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서 실천과제와 정책 발굴 등을 통해 광주 디자인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3.06.13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행복청, 공동주택 특화방안 추진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가로 친화형 주거단지로 조성

현상설계 공모 및 통합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이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새로운 주거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특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필지별 공급과 개별적인 설계·건축으로 전체 생활권의 통일되고 조화로운 디자인 및 스카이라인 구현이 힘들었으며, 동일 생활권에서도 개별 아파트 단지별 동선의 단절로 인해 주민 상호간 커뮤니티 형성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2-2생활권 10개 필지를 설계공모를 통해 공급하기로 하고, 생활권 개발 콘셉트를 '여성이 살기 좋은 아파트(가칭)'로 정해 안전성·접근성·편리성·쾌적성이 확보되는 가로친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생활권 순환산책로 조성으로 단지별 연계성을 강화해 '길 문화'를 활성화하고, 생활공방·커뮤니티센터·갤러리 등의 도입으로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여성참여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생활가로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가로변에 상시개방 및 안전감시가 가능한 시설(경비실, 주민카페, 24시 상가 등)을 배치해 자연적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법령의 규제를 완화해 다이내믹(Dynamic·역동적인) 입면계획, 다양한 평형 조합, 중앙부 증지밀 단지로의 디자인 차별화 및 입체구조 디자인 적용 등 새로운 형태의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앞으로 개별 필지별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조화롭고 창의적인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생활권별 통합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사전에 행복청의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명품 디자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 공동주택 특화방안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로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2013.06.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처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올해 순풍에 돛을 올린다!

2013.06.14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지원과

18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 공간정보산업 기반시설 구축 완성도 높여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새 이름: 바른 땅)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인 189개 시·군·구와 사업지구 지정 등을 지원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27개 시·도이며, 바른 땅 사업지구는 시·군·구청에서 대상 지역을 조사한 뒤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바른 땅 사업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측량·조사 비용 190억 원, 2020년까지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 선행 사업비 10억 원 등 200억 원을 들여 공간정보산업 기반시설 구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에 앞서 전국지자체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워크숍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13년 바른 땅 사업 추진지침을 알렸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 올해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 국·공유재산, 농지, 임야 담당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국가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뿐 아니라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며,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단독주택 밀집지역 폐·공가 공공용지로 활용

도심의 폐·공가를 정비해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도모

대구시는 올해 4억 1천6백만 원 예산을 확보해 도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 1700여동 가운데 우선 50동을 정비해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폐·공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폐·공가를 6월 현재 24동 철거 완료하고,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녹지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구도심인 중구, 남구, 서구 등에는 폐·공가가 많은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폐·공가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폐가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여름철이면 파리와 모기가 들끓어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차장 및 녹지 공간 등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시(60%)·구(40%)비에서 부담하며 폐·공가 소유자는 공공용지로 3년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부지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 폐·공가 정비 전·후 (주차장 조성중)

2013.06.19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본격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100여년간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3차원의 디지털지적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주시 판포지구와 10개소, 4,348천㎡(5,059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전담부서도 신설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의 지적도면은 100년된 낡고 훼손된 도면과 제작성된 종이도면으로 전산화되고,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측량 원점(동경기준)을 기준으로 측량 되어, 우리나라 경위도 원점 위치와 세계표준과의 편차가 365m가 발생되고 있으며, 지적경계와 지상경계의 심한 불일치로 지적불부합지가 전국 3,753만필지 중 554만 필지로서, 우리도의 경우 약20만필지(24.5%)로서 재산권 행사 및 건축 등 개발행위 제한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행정소송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지구 203천㎡(308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승인 후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다.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로 맹지 해소, 경계 분쟁 해소 등을 통해 새로운 토지 디자인으로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도민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경계조정 등 이해관계에 따른 동의 과정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 지적제도가 안고 있는 근

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분쟁이나, 손실보상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2013.06.2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달빛 재생 투어' 실시

2013년 상반기 도시재생워크숍 일환으로 대구 근대골목길 투어, 창조적 모방 통한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발굴 기획 마련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21일 도시재생워크숍 일환으로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대구 근대로의 여행'을 주제로 대구 옛 도심 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는 올 상반기 도시재생투어를 실시했다.

근대 골목길 투어는 '동산 선교사(스위쳐, 챔니스, 블레어)주택', '3·1운동 참여자를 기리는 조형물과 거리 갤러리로 재탄생한 90계단이 있는 3·1 만세운동길',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인 계산성당', '서상돈, 이상화 고택', '대구 근대역사관', '경상감영', '진골목'등을 둘러보며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스토리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발전시켜 도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실사례를 체험했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나눠 도시재생투어를 실시하는 광주시는 상반기 대구 '달빛투어'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북 군산지역을 대상으로 9월중 투어를 실시해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의 광복동 가로재생시범지구, 문화골목, 오륙도 등과 서울의 시청,

남산한옥마을 등에서 실시해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06.24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지도위에 펼쳐지는 실감 나는 부동산정보 융합행정!

토지와 건물 공간 정보를 하나로 만들어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13년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건물통합정보란, 지적과 건물정보의 개별 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적도위에 건물정보를 융합·구축하여 건물의 위치와 층수, 용도, 구조, 면적 등 행정정보를 공간정보와 함께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국민 서비스와 중앙 및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 기반정보라고 할 수 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 형태·위치 등 지도정보와 함께 건축물대장의 최신 주요정보를 일선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공간정보와 행정정보가 융합되는 빅데이터 구현, 스마트 워크,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민간 기업 등에서 핵심 기반 정보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건물통합정보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본도면으로 사용하고 최신 건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대법원 등이 관리하는 18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운영시스템이다.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면 위치정보와 행정정보가 통합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꾸립정보(콘텐츠)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물통합정보를 과세정보와 융합하면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쉽게 과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등 과세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며,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한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주민등록체제와 연계하여 전입신고지의 건물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거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후보지 계획단계와 실제 보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건물 보상비 차이를 최소화하고, 대단위 사업계획이나 특수건물의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상권분석, 시장조사, 유통·택배서비스 등에 활용되면 민간 공간정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박무의 국토정보정책관은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 737여 만 동 건물의 DB 구축 및 등록·갱신 기능의 개발과 보급을 완료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업, 일반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국 구축이 완료되는 '14년부터 부동산정보와 융합하여 활용하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통합정보의 고도화에 행정 및 기술의 총체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3.06.25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건축법에 “실내건축제도” 도입, 시설기준 마련된다.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령으로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 마련 계획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안전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며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며,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하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3.06.25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사장을 디자인한다!

공사용 건물 가림막과 가림벽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대규모의 주택단지 개발, 대형건축물 신축 및 거리 정비사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곳곳에 공사용 임시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는 만큼 도시이미지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지침을 마련했다.

대도시 곳곳에는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과 거리 정비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용 임시시설물도 설치되고 있다. 공사용 임시시설물들은 도시 미관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디자인의 한 영역으로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안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의 무분별한 광고 설치와 거리와의 부조화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가림막과 공사가림벽으로 나뉘 유형별 설치기준과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가림막은 일반형과 이미지형으로 구분해 대구옴색 중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가림벽은 대구의 상징물과 색채, 대구의 인물, 대구읍성 담장, 대구도시철도 안내, 대구 근대사진 등 대구만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60개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각의 디자인 모듈도 수록해 시공사가 디자인 제작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특이할 만한 점이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디자인은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design>)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구는 공사용 임시시설물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디자인들을 市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기업 등 공사 부서에서 공사장 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대구의 인물



■ 대구근대역사관



■ 대구 12경



■ 대구도시철도



■ 컬러풀 대구-가로수



■ 컬러풀 대구-컬러러미



■ 대구캐릭터-패션이



■ 대구음악



■ 시민참여-어린이 경시대회 수상작



■ 출산장려

2013.06.26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민·관·산·학 공동으로 신개념 도시재생형 쌈지공원 조성

부산시, 민·관·산·학이 공동으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활용하여 중구 남포동 역사주변을 '신개념 도시재생형 쌈지공원'으로 조성

부산시는 민·관·산·학이 함께 소통하는 그린 거버넌스 구축으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하고자 지난 6월 25일 중구청 회의실에서 '신개념 도시재생형 쌈지공원 조성공사 위·수탁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협약식에는 부산시, 중구청, 부산교통공사,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백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서호엔지니어링(주), (주)한영에버콘, (주)에스코알티에스 관계자가 참석하여 '빛물재사용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공원모델 제시', '도시전철역 도로시설물(환풍구, 출입구 안내판 등) 개선', '파고라 및 조명시설, 보도포장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협의하였다.

이번 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LID)을 활용하여 남포역사 주변(지하철 1호선 남포역 5번~7번 출구)을 신개념 도시재생형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이 투입되어 협약 체결 후 90일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저영향개발기법(LID) :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처음 떨어지는 위치 근처에 최대한 머물게

함으로써 강우유출량과 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키는 신중 기법)

부산시, 중구청, 부산교통공사, (사)백만평문화조성법시민협의회, (사)부산그린트러스트가 위탁자로서 ‘조성부지 제공’, ‘사업비 지원’, ‘공사진행 기술지원 및 준공 후 유지관리’ 등을 분담하게 된다. 반면 동아대 조경학과, 서호엔지니어링(주), (주)한영에버콘, (주)에스코알티에스는 수탁자로서 ‘사업비 지원(기부금 및 현물)’, ‘공사발주 및 시공’,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등을 분담할 계획이다.

특히, 쌈지공원이 조성될 남포동역사 5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 공간은 광복로 입구부분으로서의 관문적 역할뿐 아니라 롯데백화점, 영도다리, 남포동을 다 접하고 있는 도시적 지리위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시설물과 구조물, 주변부와의 차폐 등으로 인하여 도심 속의 낙후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그러한 소외된 공간이 시민의 휴게와 만남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도심 속 그린네트워크의



■ 조감도(남포역 7번출구 사이공간)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또한 불편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던 보도 쪽의 환기구 등의 도시시설물은 민관이 커뮤니티디자인을 통하여 함께 디자인경관휴게시설물로 재생시키면서 도시재생적 측면에서의 도시시설물 개선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6.27

부산광역시 녹지정책과



■ 조감도(남포역 5번출구 앞)



■ 조감도(남포역 5번출구~7번출구)

미얀마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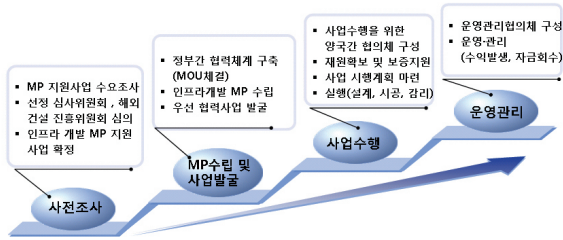
신교시·교통·물 분야 국토부 최초31억원 예산지원...
우리 기업 수주 확대 기대

우리나라가 ‘남수단 신도시 광역 인프라 건설계획’, ‘나이저리아 라고스 市 교통계획’, ‘미얀마 아야와디강 유역 수자원 개발계획’ 등 개발도사국의 인프라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준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의 일환인 인프라개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대상사업을 해외건설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으며, 그중 선정된 3개 사업은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총 25건 접수)를 바탕으로 신 시장 개척, 전후방 연계효과(Linkage Effect), 우리나라 강점 분야 및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해외건설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상기 3개 사업의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금년 9월 까지 정부 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국가에 제공하고, 후속 사업 발굴 및 우리 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해 향후에도 대상 국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도국 정부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가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해외건설을 투자개발형 산업 진출 확대, 신 시장 개척 및 공중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동력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구조

2013.06.27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국토부, 민간활용도 높은 국가공간정보 본격개방 시작했다

택지정보, 도시계획정보, 국가지명, 산업입지정보, 교통CCTV 정보 등 16종

국토교통부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융·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6종의 공간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간정보는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25개 중앙부처의 76개 시스템과 246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800여 개의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해 구축(’08~’12년)한 「공공플랫폼」의 정보 중에서 민간에서 활용수요가 많은 정보로 택지정보, 도시계획정보, 등산로정보, 사업지구정보, 국가지명, 해안선정보, 교통CCTV, 국가교통정보 등이다.

이 정보들은 포털, 통신사, 내비게이션회사 등이 영업점 설치, 부동산개발 지원, 길안내 및 지도서비스의 갱신이나 최신 정보 구축에 활용될 전망이며,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의 추가 개방을 위하여 지난 1월(1.14.~1.25.)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 1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다.

추가 개방되는 16종의 국가공간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민간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공간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기관, 업체 또는 개인은 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에 가입한 다음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내려 받으면 된다.

현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수자원·해양, 환경, 산림, 보전지역, 토지정보, 지형, 지질, 관광·문화 등 9개 분야 31종의 정보가 공개(유·무상)되어 있으며, ’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민간에 제공된 정보는 31종 약 3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적극 개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간정보를 공개하고 민간이 보유한 정보도 수집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앞으로 공간정보 개방이 확대되면 민간의 사업 활성화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7.0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이슈와 연구동향 #2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브랜드화 (2008~2013)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정부는 건축물의 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국제적인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는 영국(BREEAM), 미국(LEED), 일본(CASBEE) 등이 있다.

그동안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인증획득 건축물의 양적인 증가가 있어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국제적 공신력을 지닌 인증제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강화를 위해 한글 이름 이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영문 명칭에 대한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G-SEED'라는 새로운 브랜드 네임이 결정되었다.

본고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인증제의 브랜드화를 위해 국내·외 인증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와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

최초 본인증 획득 건축물 5년 유효기간 만료

“국내,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심사기준 없어”

“건물 운용과 친환경성 유지,
에너지 절약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 필요”

2008년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03년 최초 인증을 획득한 건물의 유효기간을 1년여 정도 남기고 인증 후 사후관리 및 재인증 제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친환경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재인증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사후관리 및 재인증 평가항목을 제안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창성, 정회영, 김강수 (2008)

- 외국 제도는 본인증 심사와 구별되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실질적인 건물의 운용과 관리, 실측 데이터에 의한 건물의 사양과 성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사후관리 단계는 설계 단계와 시공단계와 구분되는 단계로 그 평가에 있어서도 주안점과 기준이 다르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마련되고 사용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함.(p77)
- 외국의 사후관리 제도는 건물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건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커미셔닝을 통한 전문가 위임, 건물 운용 데이터의 모니터링, 실측 데이터의 확보 등이 모두 제도적 장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사후 관리 심사를 통해서 평가되어 짐.(p78)
-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토지이용 부분이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에너지 부분에 많은 평가항목 보완이 필요.(p84)

2009년

학교시설 인증획득 의무화 - 성과와 한계

“3년 6개월 만에 332개
인증획득 급증”

“최우수등급 한 건도 없어,
양적인 성장만”

2005년부터 학교시설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증가했다. 학교시설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BTL 사업자 선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2005년 3월부터 인증제도에 추가된 학교 시설은 2006년까지 총 8건이었던 인증획득 실적이 2007년 120여건, 2009년 330여건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시설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인증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김용석, 정지나, 이상홍, 박상동 (2009)

- ▶ 국내외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비교해본 결과 LEED for School의 경우 ‘에너지’와 ‘실내환경’ 중심으로 배점 및 필수항목이 분포되어있어 이용자의 ‘학습환경’ 및 ‘건물 에너지 성능’에 평가의 비중이 실려 있는데 비해, BREEAM Education에서는 ‘환경부하 절감’에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음.(p62)
- ▶ GBCC는 각 평가범주가 고른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생태환경’, ‘재료 및 자원’ 분야에서 타 기준에 없는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1 항목당 평균 배점이 2088(43항목, 124점)으로 1.54점임 BREEAM(79항목, 122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이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의 편차가 타 인증기준에 비해 심하고, 각 범주별 평가가 세분화되어있지 못함을 보여줌.(p62~63)

곽문근, 최창호 (2009)

- ▶ 수자원 부분의 중수도 설치, 환경오염부문의 이산화탄소배출저감,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억제, 먼지역제를 위한 천연잔디 사용 개선 필요.(p687)
- ▶ 학교시설의 경우 135㎡ 이하인 시설에서는 중수도의 생산단가가 상수도 보다 높으며 중수로 활용할 물의 양이 적게 되면 중수도의 설치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비경제적으로 나타남. 하지만 환경오염의 방지 및 상수원의 보호라는 취지에서 국가적인 지원, 인센티브 추가필요.(p684)
- ▶ 오존층 파괴 없는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천장형 전기 냉난방방식에 대한 설비 검토 필요, 저렴한 비용의 스티로폼 단열재 대신 친환경성 단열재 혹은 흡음재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p686)
- ▶ 천연잔디는 초기설치 비용과 잔디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꺼리는 상황, 최근 페타이어 재료를 이용한 인공잔디가 문제시 되고 있어 인체에 무해한 천연잔디 설치에 인센티브 강화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 수립 필요.(p687)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실내 환경부문은 인증기준에서 핵심적인 부문이며 그중에서도 실내 빛 환경 평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에서는 조명 에너지 절약 항목이 있을 뿐 자연채광의 실내도입과 관련된 에너지 항목은 없어 선진국에 비해 실내 환경부문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자연채광 도입정도를 등급화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의 실내환경 부문에 있어 아직 정량화 되지 않은 평가 기술 및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동환 (2009)

- ① 수차례에 걸친 모든 LEED의 개정안을 볼 때, 가장 많은 변화를 보여준 부분이 자연채광에 대한 평가기준임. (p150)
- ② LEED 2009와 같이 그린빌딩 디자인 단계에서 기본적인 자연채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투과율과 창면적 및 바닥면적비 등을 이용한 가이드라인, 노모그래프 또는 간략화된 식들을 이용한 자연채광 평가기준 제시 필요. (p151)

국내 건축물 에너지 및 친환경기술 관련 인증제도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여러 제도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수많은 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는 건축주와 인증신청자들에게 혼란을 유발시키며, 반복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많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인증제도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거나, 영국의 BREEAM과 미국의 LEED의 제도별 특징을 도출하여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김삼열, 김형보 (2010)

- ① LEED는 에너지 및 대기, 수자원효율 항목, 지속 가능한 부지계획 항목의 배점이 상향 개정되었고, BREEAM은 에너지, 수자원효율 항목의 배점이 상향 개정 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평가방법의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p278)
- ② BREEAM은 에너지 항목을 2005년 136/900점에서 2008년 19/100점으로 6% 증가시켰고, 환경오염 항목은 0.4%증가시킴. LEED는 Ver1.0에서 Ver2.2로 개정하면서 에너지 항목을 10점에서 17점으로 증가시켰으며, LEED2009에서는 전체 항목의 3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그 중요도가 급격히 상승함. (p277)

2009년

실내 빛 환경 평가 중요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
실내채광 관련
에너지 항목 없어”
“자연채광 실내도입
항목 필요”

2010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된지 8년 만에 개정작업

“BREEAM, LEED는
1~2년 주기로 업그레이드”
“국내 인증제도 50% 이상이
유사항목으로 구성,
중복평가 항목
통합 및 보완필요”

2011년

국내 상황에 맞는 인증제도 개발 중요

“한국 상황에 적합하고,
국제적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 발전 되어야”

2011년은 인증제도의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에 맞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위한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 진행되었다 이전 연구들에 비하여 가장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증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가참희, 박상동, 전영훈, 태춘섭 (2011)

- ▶ 미국의 LEED V3 지역부가항목은 도시의 우편번호 마다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여 설정된 총 6종의 항목 중 최대 4종의 지역부가항목에서 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음.(p276)

이현우, 최창호 (2011)

- ▶ LEED와 국내 친환경인증의 경우 근본적으로 지리적, 기후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항목 및 배점의 분포에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LEED는 에너지와 수자원 항목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높은 등급의 친환경인증을 받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에서 중요시되는 녹지율, 생태면적률, 유지보수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p85~86)
- ▶ 국내 친환경인증의 경우 국내 교통시스템 및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고 토지가 좁아 다른 항목에 비해 교통, 토지이용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으므로 무조건적인 LEED 적용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p86)

2012년

국내 인증제도 국제 사회 인지도 낮아

“선진국 이미 다각적인 측면
에서 친환경 정책수행 중”
“평가항목보다 운영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그동안 인증제도와 관련된 연구들이 평가부분의 증대와 평가항목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면 2012년에는 인증제도의 운영방식, 심사방식, 지원방식 등 운영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김학건, 김정민, 이여경, 이정형 (2012)

- ▶ 인증제도 운영시스템은 주관-심사-개선 주체가 일원화 된 운영구조가 되어야 함. 심사기관의 단일화는 각 기관별 인증절차와 기준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 온라인 심사 도입 시 심사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어 인증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p264)
- ▶ 지원시스템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과 함께 제도개선과 검증에 대한 연구프로그램, 전문가적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친환경 산업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p264)

인증제도가 도입단계를 지나 구축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책방안과 함께 국제적 브랜드 강화를 노리는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목선수, 박아름, 조동우 (2013)

- ④ BREEAM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BREEAM Standard와 국외에서 사용되는 BREEAM International로 구분되어, 지역적 특성 및 특수 건축물 용도별 기준에 용이하게 평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미국 녹색성장정책에는 공공 업무용 건축물의 LEED인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대상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p313)
- ④ 인증제도는 정책방안과 함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홍보, 교육 등이 적극적인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p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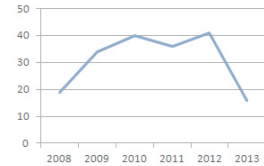
2013년

국제적 위상 높이는
인증제도 육성

국외에서는 이미.
“BREEAM, 타국가 맞춤형
인증제도 개발”

[녹색건축 인증제도] 키워드 분석리포트

*발표 논문 수



1. 최근 5년간 국내 발표 논문 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3
논문수	19	34	40	36	41	16
전년대비 성장률	-	79%	18%	-10%	14%	-61%

2. 주요 저널

순위	저널명	전체 논문 수
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
2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
3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4
4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4
5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
6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6
7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6
8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6

3. 국내 주요 연구자

[김강수] [전한중] [김상범] [김재준] [정지나] [목선수] [조성우] [김병선] [정희영] [김창성]
 [임태섭] [임영환] [최창호] [이현화] [박철용] [이진숙] [이성욱] [태춘섭] [이병호] [이규인]
 [권영철] [박아름] [송옥희] [이현우] [양정훈] [송승영] [곽문근] [신성우] [손보식] [조동우]
 [모지선] [김철] [최정민] [문미선] [박상동] [김정태] [김주형]

4. 주요 관련 키워드

[학교시설] [Maintenance] [LEED] [LEED 2009] [생태환경]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
 [Energy] [지속가능성] [주거만족도] [Daylighting] [Green Building] [자연채광]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친환경 건축자재] [BREEAM] [Office] [Apartment] [Certification System] [CASBEE] [gbXML]
 [친환경] [Green Apartment] [업무시설] [친환경건축물] [시뮬레이션] [업무용건축물] [GBCC] [LEED ND]
 [평가기준] [친환경요소] [BIM] [평가항목] [온실가스]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7월호 (통권6호)

발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일 : 2013.07.20

발행인 : 제해성

ISSN : 2288-274X

편집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담당자) 031-478-9845, kslee@auri.re.kr (이경신)



9 772288 274008
ISSN 2288 - 274X